

제168호 (2008. 8. 18)

■ 경제 동향

·“공공건설 22.1% 증가, 민간건설 9.4% 감소”

■ 정책·경영

·“건설업체 자금 조달 여건 더욱 악화될 듯”

·“해체 공사시 분별 해체 의무화 필요”

■ 정보 마당

·보호무역의 정치적 배경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법대로보다 제대로를...”

“공공건설 22.1% 증가, 민간건설 9.4% 감소”

- 「2008년 상반기 건설 수주 동향」 : 공공 건축 호조세, 민간 건축은 부진 -

- 2008년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 건축 수주가 호조를 보였으나, 토목 수주가 공공 부문의 발주 지연 및 민자 사업의 감소로 부진하였고, 민간 주거용 건축 수주도 규제 영향으로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55조 1,230억원을 기록함.
- 공공 부문의 상반기 실적은 토목 수주가 1/4분기에 발주 지연으로 부진하였으나, 2/4분기에는 발주 정상화로 호조를 보였고, 건축 수주가 상반기 내내 증가세를 지속하여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17조 4,437억원을 기록함.
 - 공공 토목 수주는 1/4분기에 공공 물량 발주 지연으로 크게 부진(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하였으나, 2/4분기 발주 정상화로 수주 물량이 증가함(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으로써 상반기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함.
 - 공공 건축 수주는 1/4분기에 주거용 건축 수주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125.0% 증가하고, 2/4분기에는 비주거용 건축 수주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52.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5% 증가함.
- 민간 부문 상반기 실적은 토목 수주가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한 가운데, 주거용 건축 수주가 부진(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37조 6,793억원을 기록함.

2008년 상반기 건설 수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 분	합계	발주처별						공종별			
		공공	토목	건축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1/4분기	-3.4	18.2	-18.8	125.0	-12.0	-24.8	-10.1	-20.6	4.1	21.3	-18.8
1월	-11.4	1.0	-56.7	177.5	-15.4	-47.6	-12.2	-54.3	3.4	-2.3	13.9
2월	-5.0	5.1	-10.7	45.8	-9.3	94.8	-14.7	4.0	-8.0	1.4	-23.0
3월	4.0	39.2	-0.1	159.4	-11.2	-37.2	-3.6	-15.3	16.1	79.5	-35.7
2/4분기	0.2	25.7	10.5	52.5	-7.6	-4.6	-8.2	3.5	-1.1	-25.5	55.8
4월	1.2	-1.3	-36.7	55.1	2.2	-4.8	3.3	-24.8	10.7	-1.9	34.1
5월	29.8	69.9	86.0	43.7	14.3	1.9	17.1	49.6	21.1	-6.9	70.1
6월	-19.9	9.3	-14.7	59.6	-26.2	-8.3	-30.1	-11.2	-23.0	-48.8	64.9
상반기	-1.4	22.1	-4.8	81.5	-9.4	-11.9	-9.0	-7.6	1.1	-7.8	17.3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상반기 민간 건축 수주는 4월과 5월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여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하였는데, 특히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규제의 영향으로 주거용 건축 수주가 부진(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함.
- 2008년 상반기 재건축·재개발 수주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조기 사업 물량과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로 재개발 수주가 1/4분기에, 재건축 수주가 2/4분기에 큰 호조를 보임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한 9조 4,599억원을 기록함.
 - 재개발 수주의 상반기 실적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한 조기 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1/4분기에 큰 호조(전년 동기 대비 109.7% 증가)를 보였으나, 조기 사업 물량이 감소한 2/4 분기에는 부진(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한 7조 427.9억원을 기록함.
 - 재건축 수주의 상반기 실적은 1/4분기 소폭 증가(2.6%)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로 2/4분기에 큰 호조(전년 동기 대비 97.7% 증가)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56.9% 증가한 2조 320억원을 기록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상반기 재건축 실적은 호조를 보였으나 재개발 수주 실적은 다소 부진(전년의 40.9% 수준)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재개발 수주가 호조를 보임.
 - 상반기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은 대략 4조원으로 재건축 실적은 전년도 70.4%의 금액이 이미 상반기에 수주된 반면, 재개발 실적은 전년도 40.9%밖에 되지 않음.
 - 경기도의 상반기 재건축·재개발 수주 실적은 대략 2조원으로, 재개발 수주 실적이 전년도 1.5배 수준으로 호조를 보임.

재건축·재개발 수주 증감률 추이

(단위 : %, 십억원)

상반기 수주 실적	재건축	재개발	총계
1/4분기 증감률	2.6	86.7	86.7
2/4분기 증감률	97.7	-16.4	2.3
상반기 증감률	56.9	27.6	32.9
1~6월 수주액	2,032.0	7,427.9	9,459.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연구원: igata99@cerik.re.kr)

“건설업체 자금 조달 여건 더욱 악화될 듯”

－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 효과 분석」－

■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상향 조정(2008. 8. 7)

- 기준금리가 동결된 지 11개월 만에 드디어 5.00%에서 5.25%로 0.25%p 상승
 - － 한국은행은 최근 내수 부진으로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산될 것을 우려, 기준금리를 0.25%p 상향 조정
 - － 소비자 물가 및 근원 인플레이션이 10여 년 만에 각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유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금리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CD금리에 연동하는 시중 은행의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초과
 - －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6월부터 CD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번 기준금리 상승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CD금리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음.

■ 건설기업, 이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대상 업종으로 분리돼 금리 스프레드 증가

-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이전부터 건설기업들은 미분양 물량 등이 증가하면서 이미 금융기관에서는 리스크 관리 대상 업종으로 분리,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된 상황임.
 - － 주택 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건설기업들은 이미 금융기관들의 기업 대출 심사에서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지정,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금리 스프레드를 적용받아 왔음.
 - － 기준금리 상승, CD금리 상승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 조달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 한편, 기준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대출 부담이 증가, 주택 구매 수요를 크게 위축시켜 미분양 해소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 기업들의 자금 수요 증가…금리 상승대출 조건 강화로 더욱 악화 전망

- 주택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자재 가격 등의 급등으로 건설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수급 불균형 심화가 예상됨.
 - 자금 수요에 비해, 금융기관들의 자산 증가 억제, CP 발행 기준의 강화 등으로 자금 조달 여력은 과거보다 급격히 하락, 중견 기업들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건설기업들의 부채 비율 증가, 현금 흐름 악화가 하반기에 더욱 심화될 전망
 -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에 따른 외환 자금 차입 축소 등이 악재로 겹치면서 당분간 금융기관과 기업 모두 심각한 자금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금융 불안 해소 도모 필요

- 보유 부동산 처분을 통하여 과도한 담보 대출의 상환을 지원하여 가계의 이자 비용 경감, 금융기관들의 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여 년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주택 보유 가계들은 주택 처분시 대출금의 일정 부분은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을 소화할 매수 여력이 크게 낮고, 매도자 역시 과도한 거래세 부담을 인해 대출금의 상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양도세 완화를 통한 매도 지원과 종부세 및 금융 규제 완화로 매수자의 구매 능력을 지원하여 건설기업들의 과도한 신용 경색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과도한 양도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처분을 통한 담보 대출 상환을 유도,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과도한 이자 부담은 결국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 한편, 신규 주택 판매가 매우 미진하여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고 있으므로 신규 주택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주택 구매 금융 지원 확대가 요구됨(LTV 및 DTI 규제의 부분적 완화).

김현아(연구위원·hakim@cerik.re.kr)

“해체 공사시 분별 해체 의무화 필요”

■ 현행 해체 공법의 문제점

-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2007~11)’에 의하면,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 골재의 공급 물량을 2011년에는 1,645만 톤으로 현재보다 약 3배 확대하고,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폐재 배출량 대비 순환 골재 사용 비율도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으로 있음. 나아가 건설 폐기물의 감량화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2011년의 건설 폐기물 감량화 목표율을 15%로 설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건설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의 무기성 폐기물과 폐플라스틱 등의 유기성 폐기물, 그리고 폐금속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별 해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복합적으로 배출되고, 결과적으로 분리 선별이 곤란해지면서 재활용률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브레이커나 압쇄기 등 대형 장비나 폭파에 의한 ‘선험체 후선별’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체 방법은 높은 작업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해체 후 잔재들의 분별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음. 즉, 우리나라의 해체 기술은 아직까지 해체 효율만을 중시하는 철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워터 제트(water jetting), 다이아몬드 와이어쏘(diamond wire saw), 특수한 화학 약액(soundless chemical demolition agent) 응용 공법 및 미소 발파(mini blasting) 공법 등을 도입,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으나, 시공성·경제성·적용성 등의 문제로 사장되거나 극히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음.

■ 해외 사례

- 일본·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해체 잔재의 활용성을 중시하는 ‘분별 해체(dismantling 또는 deconstruction)’ 단계에 이미 진입해 있음.
 - 일본에서는 2000년 5월 「건설 리사이클법」을 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공 기준에 따라 폐콘크리트, 철근, 폐아스콘 등을 현두산중장에서

분별 해체하고, 이를 재자원화하는 방안을 의무화시킨 바 있음.

- 일례로 바닥 면적 80m² 이상의 해체 공사나 바닥 면적 500m² 이상의 신·증축 공사, 공사 금액 1억 엔 이상의 건축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분별 해체가 의무화되어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해체 잔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 분별 해체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해체 잔재의 95%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 영국에서도 해체기술인협회(The Institution of Demolition Engineers)와 CIRIA(Construction Industry Research and Information Association)를 중심으로 건설 폐기물 감량화 및 분별 해체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분별 해체 의무화 필요

- 해체 공사에서 분별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순환 골재의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외국의 사례 조사에 의하면, ‘선분별 후해체’ 방식은 ‘선해체 후선별’ 방식에 비하여 해체 잔재의 재활용률을 25%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함.
 - 또한 건설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성상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하므로 발생 단계에서 성상별 분리 선별이 이루어질 경우,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절약되고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분별 해체가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는 유해성 폐기물의 분리 수거를 들 수 있음.
 - 1970년대 전후로 건립된 많은 건축 구조물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나 유리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는 해체 전에 이러한 유해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고 해당 관청의 검사를 받은 후, 구조물 해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심각성은 인지하면서도 아직까지 분리 선별에 소극적이므로 분별 해체 방식을 의무화하여 유해 폐기물을 사전에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
- 끝으로 순환 골재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해체 공사 수행시 분별 해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함께 공공 부문의 시범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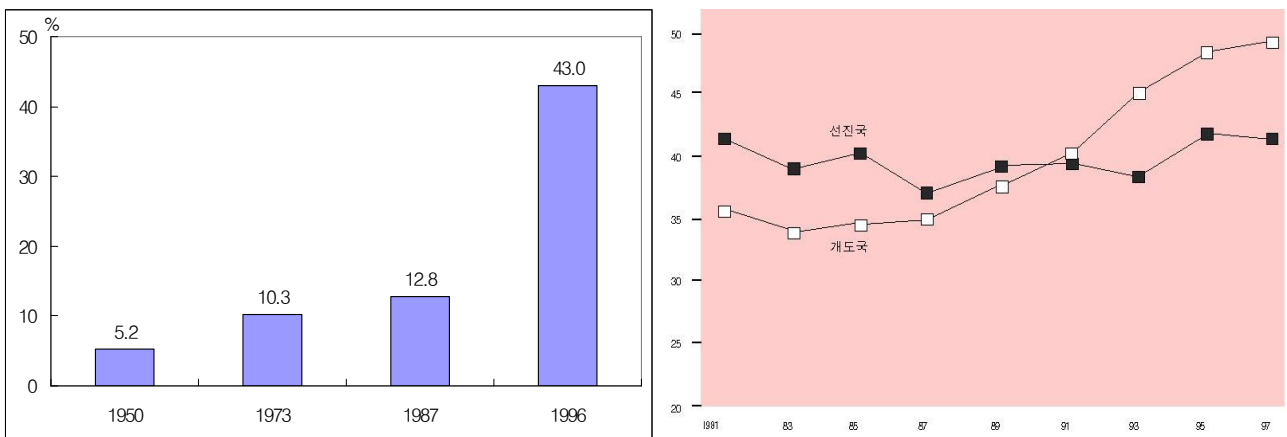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보호무역의 정치적 배경

■ 험난한 무역 자유화의 길

- 장기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은 자유무역 등을 통한 국가 간 교역의 확대이지만, 최근 자유무역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음.
 - 무역이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5%에서 1996년에는 43%로 증가
 - 세계 153개 국가가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의제(WTO) 협상이 지난달 결렬
 - 한미 FTA 역시 양국 국회의 비준이 불투명한 상태임.

세계 총생산 대비 무역 비중 추이



자료 : World Bank, Entering the 21st Century, 2000.

■ 보호무역의 사례

- 보호무역주의는 소수 집단의 경제적 이해 및 변화에 대한 대중적 불안감을 반영하면서 각국에서 깊은 뿌리를 갖고 있음.
 - 각 산업의 이익 집단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 외국 경쟁자들이 몰고 올 가격 인하와 기술 혁신을 두려워하여 자유무역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음.
 - 1660년 이후 영국은 농민과 지주를 수입 곡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입 관세 부과 → 곡물 가격 인상 → 임금 인상, 계층 간 갈등 → 「곡물법」 반대 운동 → 1846년 「곡물법」 폐지

-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을 보호무역으로 대응 → 1930년 평균 관세율 60%의 「스무트-할리 관세법」 제정 → 각국 보복 관세, 무역 전쟁 확산 → 불황 심화 → 2차 대전 배경
- 1970·80년대 일본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 증가 → 미 자동차업계는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회에 압력 → 일본은 소형차 대신 고급차로 수출 차종 변경해 연간 50억 달러의 추가 수익 획득 및 현지생산으로 보호무역 무력화

■ 정치적 과정을 통한 보호무역 강화 : 농업의 예

- 각국의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정치 체제의 맹점을 이용해 보호무역을 강화
 - 미국의 상원은 토지를 대표 : 상원에 대한 농업 생산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비대해져 농업 보조금 등의 유지에 기여
 - 프랑스 유권자 중 농민은 4%이지만, 높은 투표율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은 막강 : 프랑스 시장의 1/3이상은 전·현직 농업 종사자
 -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현대판 「곡물법」이라는 지적
 - 한국의 경우, 선거구 간 인구 편차로 농촌 유권자의 영향력 확대 → 농업 과잉 보호 → 농산물 고율 관세(평균 63.2%) → 세계적으로 비싼 농산물 가격 → 서민 부담 증가

■ 자유무역 :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이유로 반대하는 경향 우세

- 대체로 세계 각국의 일반인들은 자유무역을 지지
 - 2002년 44개 국가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 중 25개 국가의 60% 이상이 세계화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응답
- 미국의 정책연구소인 German Marshall Fund 조사에 의하면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믿는 미국인은 2005년 51%에서 2007년 57%로 증가하는 등 부정적 견해가 확산
 - 프랑스인의 절반, 미국인의 1/3 정도는 더 이상의 무역자유화를 원하지 않음.
 - 독일인의 절반, 미국·프랑스인의 3/5는 자유화가 더 진행되면 실업 증가 유발 우려
- 보호무역의 폐단은 이로 인해 국민경제 특히 무력한 서민이 치러야 할 경제적 희생임.
 - 세계은행은 보호주의 장벽 제거가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을 1.2~2.6% 높인 것으로 추정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공공기관 회의 참여 현황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2008. 8. 5	통계청 (한국조사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외부 통계 품질진단위원 위촉 통계청의 통계자료 중 '건설업의 금융 실태' 관련 진단 참여
2008. 8. 6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안정분석국 간담회 참여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간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 : 부동산 시장 부문
2008. 8. 7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건설과 자문회의 참여 건설 관련 규제 및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에 관한 자문회의 참여
2008. 8. 8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정책과 시장분석팀 회의 참여 7월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의 동향 점검을 위한 'EWS 지표' 점검 회의 참여

■ 주요 대외 활동 추진 현황

- 8. 7,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회 의장 초청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와 정책 과제' 발표
 -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 동향 : 공공 건설시장의 공사 물량 감소 추세 및 중견·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급감, 주택시장의 미분양 증가 및 주택 경기 위축 상황
 - 진단 : 건설시장의 내부 및 외부 여건 모두 악화, 제도적 요인과 겹쳐서 심각한 불황 국면에 직면, 건설업체 붕괴 시 국내 경제에 큰 부담 작용 및 국내 경기의 장기 불황 우려 등 제시
 - 건설산업 회생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시장 경제 원리를 적용한 건설시장 질서 구축,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의 신뢰성 제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 수립 필요
- 8. 12, 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8년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 교통 R&D 정책 / 인프라 사업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 참여

■ 기타 연구원 활동

- 2008년 지방 순회 간담회 실시
 - 8월 12일 부산시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1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008년 지방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최근 지방 건설 경기 및 주요 정책제도 개선 의견 수렴

“법대로보다 제대로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고유가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불안에 싸여 있다. 국내 경제 상황도 예외 없이 고물가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미분양 증가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이 예고돼 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세제 규제 카드로 발 등의 불은 꺾지만 눈앞의 큰 불은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잠복된 문제 해법을 보는 시각에서 정치와 기업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정치의 법 대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와중에 여권과 야권은 세제 완화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세제 완화 대상을 소득 수준 위쪽에 두는 반면 야권은 아래쪽에 두고 있다. 모두 시장보다 표심의 눈치를 더 살피고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와 정부는 시장을 우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장을 살리는 데는 법대로 보다 제대로가 낫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이 ‘선진화·글로벌화’다. 글로벌화는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소수 길거리 목소리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가 표로서 제대로 가야 하는 방향에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현 모습은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상대 없는 씨름판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언론들에게는 좋은 기사 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도 시장과 기업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거부감만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

현안 문제 해결이 급하다고 해서 또 다른 세금 방식으로 불을 꺼서는 안 된다.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큰 틀을 먼저 보여주고 현 시점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택해야 설득력을 가진다. 법대로는 감성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는 실용성과 유연성을 중시한다. 될 수 있는 것만 법에 담는 법·제도 중심에서 안 되는 것만 법에 담는 네거티브식으로 법과 제도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백분의 일의 속도에 시장의 변화를 맡길 수 없다.

국내 경제 비중 중 가장 큰 건설산업이 현재 큰 위기에 빠져 있다. 방관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제대로 갈 수 있는 정책 실현이 시급하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따져볼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게 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